



노후 농공단지 실태와 대응방향

- 전라북도를 중심으로 -



양원탁·정미선
(전북연구원)

CONTENTS

1. 노후 농공단지 개요
2. 전북 노후 농공단지 현황
3. 전북 노후 농공단지 실태
4. 전북 노후 농공단지 재생 방향



1. 노후 농공단지 개요

1. 농공단지 개요

농공단지는 농어촌 지역에 농어민 소득증대를 위해 조성되며 국가·일반단지와 구별

- 농공단지는 ‘농어촌 지역’에 ‘농어민의 소득증대 산업’ 육성을 위해 조성(「산업입지법」 제2조)
 - 급속한 산업·도시화에서 소외된 농어촌의 산업기반 구축과 농외소득원 창출을 위해 1980년대 이후 조성 추진
- 농공단지는 지역, 조성목적, 규모, 주체 측면에서 국가·일반산업단지와 구별되는 특수성을 지님
 - (지역) 「농어촌정비법」 제2조에 따른 농어촌 지역을 대상으로 함(「산업단지 통합지침」 제6조)
 - (목적) 농어촌지역에 농어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산업의 유치 및 육성(「산업입지법」, 제2조)
 - (면적) 단지별 면적은 3만 m² 이상 33만 m² 이하, 시군별 100만 m² 범위 내(「농공단지 개발지침」 제7조)
 - (주체) 지정 및 관리권자는 기초 지방자치단체장(시장/군수) 승인권자는 시도지사(「산업입지법」, 제8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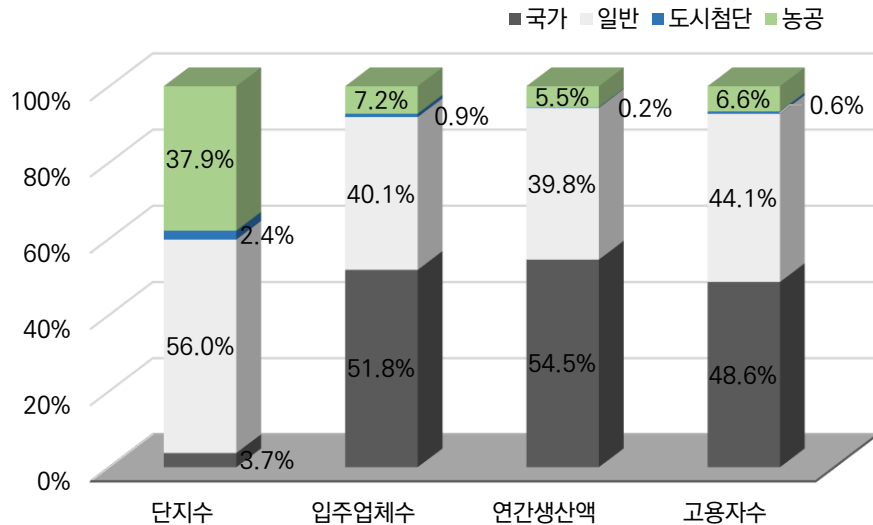
〈표 1〉산업단지 유형별 조성목적 및 주체

구분	조성목적	지정권자	관리권자	비고
국가산업단지	국가기간산업, 첨단과학기술산업 육성 또는 낙후/둘 이상의 시·도 걸친 산업 개발	국토부장관	산업부장관	낙후지역 등
일반산업단지	산업의 적정한 지방 분산 촉진 또는 지역경제의 활성화	광역(기초)단체장	광역(기초)단체장	규모별 차등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식·문화·정보통신산업 육성 또는 기타 첨단산업 육성과 개발 촉진	국토부장관, 광역(기초)단체장	광역(기초)단체장	규모별 차등
농공단지	농어촌지역에 농어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산업의 유치·육성	기초지자체장	기초지자체장	농어촌지역

2. 노후 농공단지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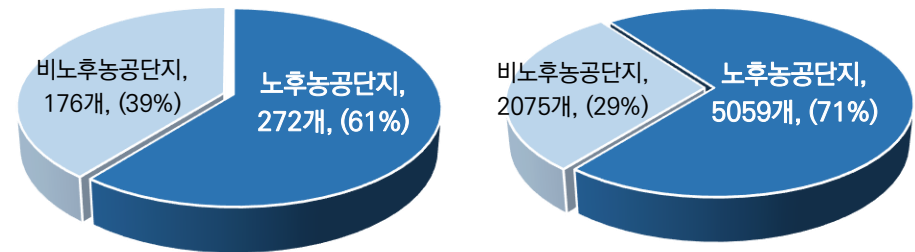
국내 농공단지는 448개에 달하며, 61%(272개)는 착공 후 20년 이상 경과(2019)

- 우리나라 농공단지는 총 448개(37.9%)에 달하며, 전체 산업단지 생산의 약 5.5% 차지
 - 농공단지 입주업체는 총 7,134개(7.2%), 고용은 총 128,292명(6.6%), 연간생산액은 47.5조원(5.5%)임(산업단지현황통계, 2019)
- 국내 농공단지의 61%는 착공 후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 농공단지로 물리적, 기능적 경쟁력 약화 발생
 - 전국 노후 농공단지는 272개로 전체 농공단지의 61%를 차지하며, 입주업체는 5,059개(71%)에 달함(산업단지현황통계, 2019)
 - 산업단지 기반시설 및 생산시설의 노후화, 입주업체의 이탈과 생산성 저하, 시군의 농공단지 관리수요 증가 및 행정부담 등



자료: 전국산업단지현황(2019)

〈표 1〉 우리나라 산업단지 유형별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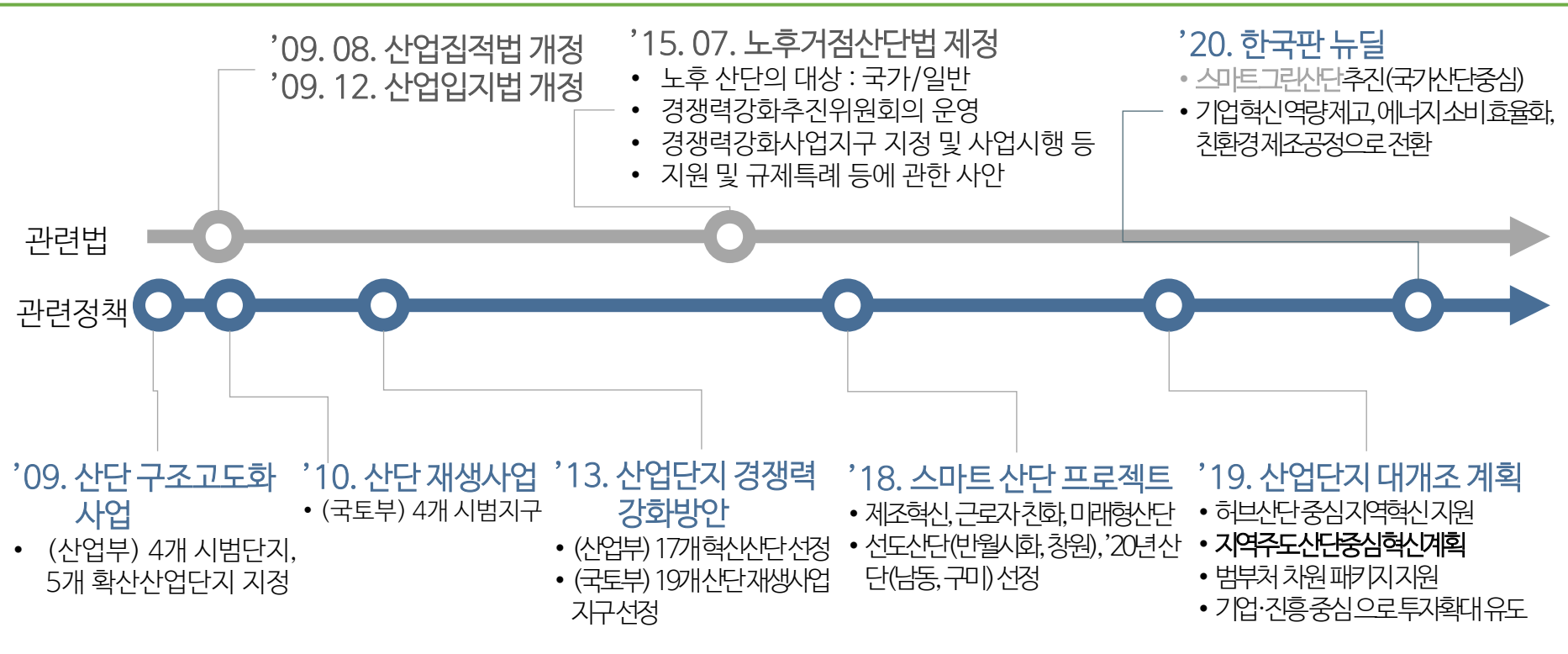
자료: 전국산업단지현황(2019)

〈그림 2〉 우리나라 노후 농공단지 비중

3. 국내 산업단지 정책 동향

국내 노후산업단지 정책은 세계화와 산업구조 변화 속에서 2000년대부터 이후 추진

- 최근 산업단지 정책 : 범부처 + 지역 역할 강조, 반면 농공단지 정책 추진은 제한적



부처간 연계 부족, 중앙 주도 정책,
지역혁신거점 역할 한계, 산단 유형 미고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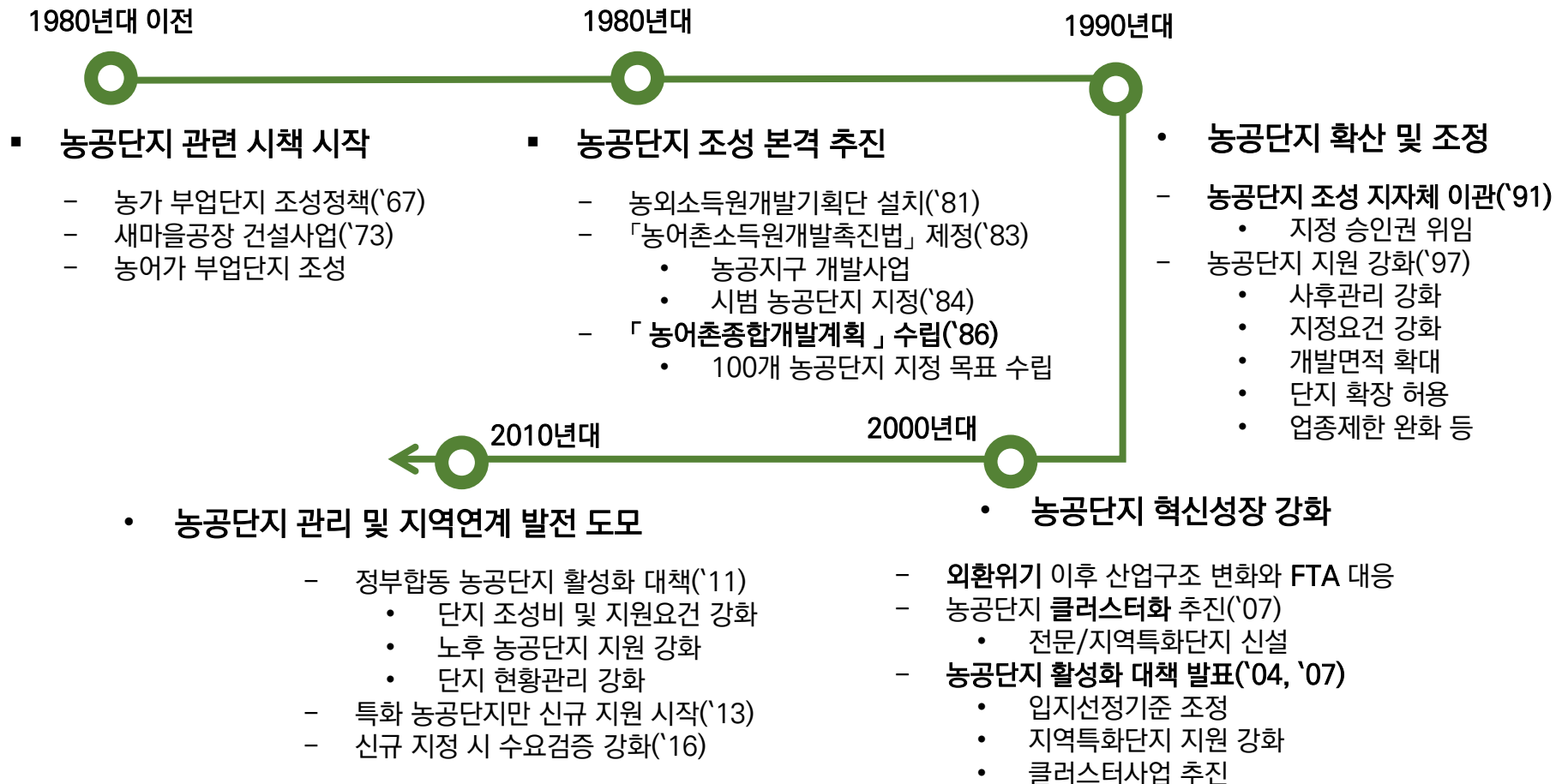
범부처, 지역 중심, 산단별 특성 반영 등을 통한
“노후 산단의 혁신성장 거점화”,
“디지털 기반 친환경 제조공간 전환”

4. 국내 농공단지 정책 동향

국내 농공단지 정책은 개발 중심에서 특화 및 지원관리 강화로 전환되고 있음

○ 노후 농공단지 증가 및 관리수요 증가 → 개발 중심에서 관리 중심으로 정책 전환 추진 중

- 1990년대 이후 농공단지 정책 지자체 이관 → 지자체별 농공단지의 정책중요도, 예산, 지원체계 마련 정도 차이





2. 전북 노후 농공단지 현황

1. 전북 농공단지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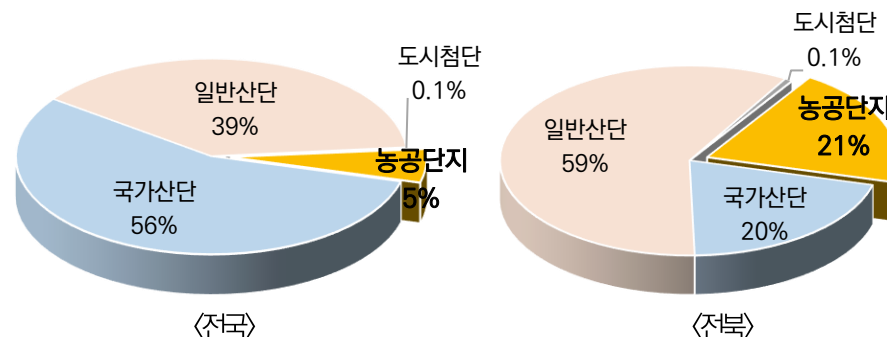
전북 농공단지는 59개로 단지별 규모는 작지만, 산단 생산 및 고용 비중은 20%에 달함

- 전북 농공단지는 59개(67.0%)로 개수가 많으나, 면적 합계는 11.3km²(8.6%) 수준
 - 전북 농공단지 면적 합계는 국가산업단지의 13.0%, 일반산업단지의 33.7%에 불과함(전국산업단지현황, 2019)
- 전북 농공단지는 산단 생산/고용의 20%(국가산단 수준)를 차지하며, 지역경제 중요한 역할
 - 전북 농공단지는 입주업체의 28.4%(977명), 고용의 19.4%(15,327명), 생산액의 20.7%(8.2조원)을 차지(전국산업단지현황, 2019)
 - 전북 농공단지의 생산 비중(20.7%)은 전국 비중(5%)의 4배에 달하며, 지역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표2〉 전라북도 노후 농공단지 현황

(단위 : 개, 천m², 명, 십억원)

구분	단지수	지정면적	입주업체	고용	생산액
국가	6 (6.8%)	86,970 (65.9%)	1,218 (35.4%)	15,326 (19.4%)	7,902 (19.9%)
일반	22 (25.0%)	33,602 (25.5%)	1,185 (34.5%)	47,797 (60.6%)	23,279 (58.7%)
도시첨단	1 (1.1%)	110 (0.1%)	56 (1.6%)	365 (0.5%)	263 (0.7%)
농공	59 (67.0%)	11,326 (8.6%)	977 (28.4%)	15,327 (19.4%)	8,222 (20.7%)
합계	88 (100.0%)	132,008 (100.0%)	3,436 (100.0%)	78,815 (100.0%)	39,667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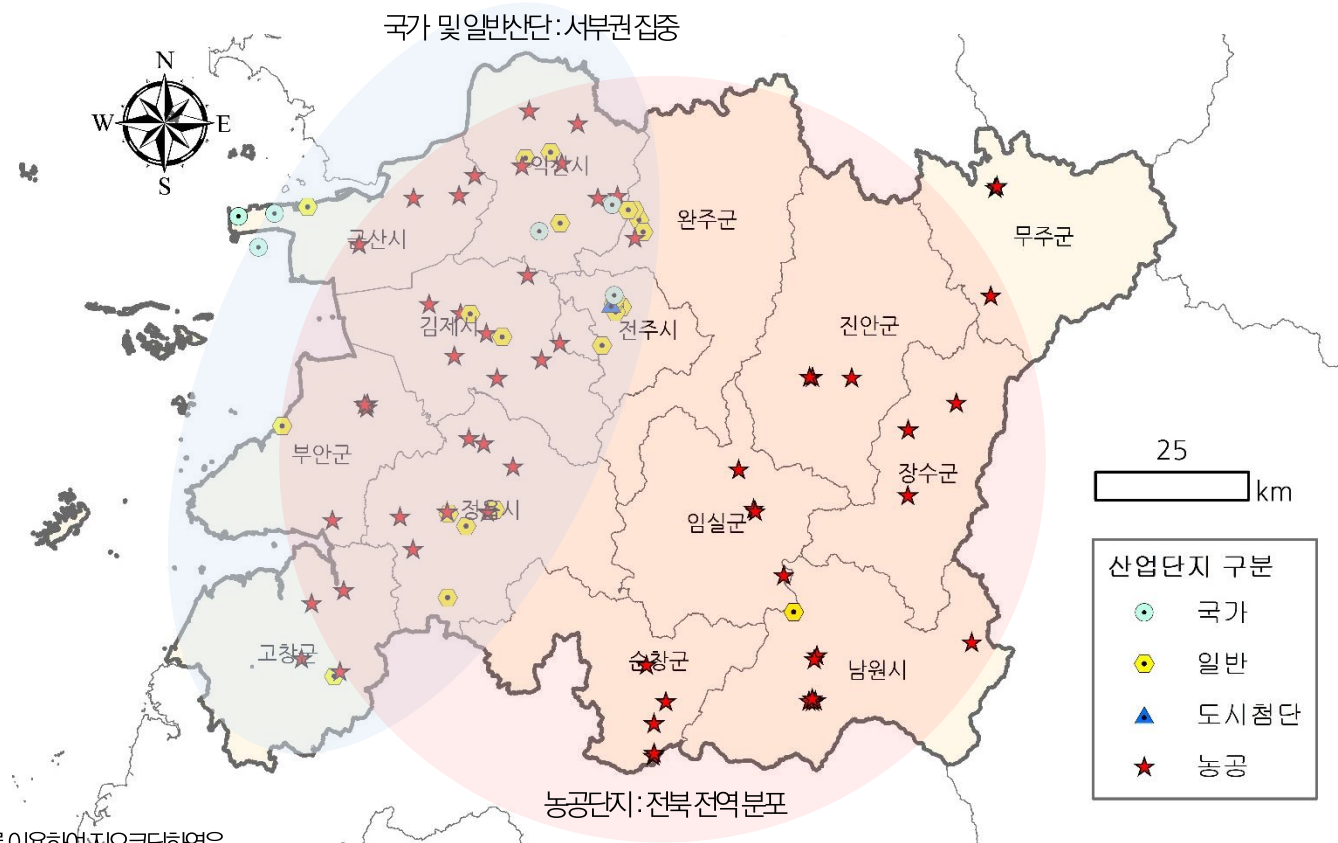
〈그림3〉전국과 전북의 농공단지 생산액 비중 비교

1. 전북 농공단지 현황

전북 농공단지는 전북 전역에 분포하고 있으며, 농어촌 지역의 산업거점 역할

○ 전북 농공단지는 국가·일반 산업단지와 달리 전북 전역에 분포하고 있음

- 전북 농공단지는 산업기반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동부권에도 고르게 분포하며, 농어촌 지역의 산업거점 역할 담당



〈그림 4〉전라북도 산업단지유형별 분포 현황(2019)

2. 전북 노후 농공단지 현황

전북 농공단지의 52.5%는 노후 농공단지이며, 농공단지 생산액의 73.3%를 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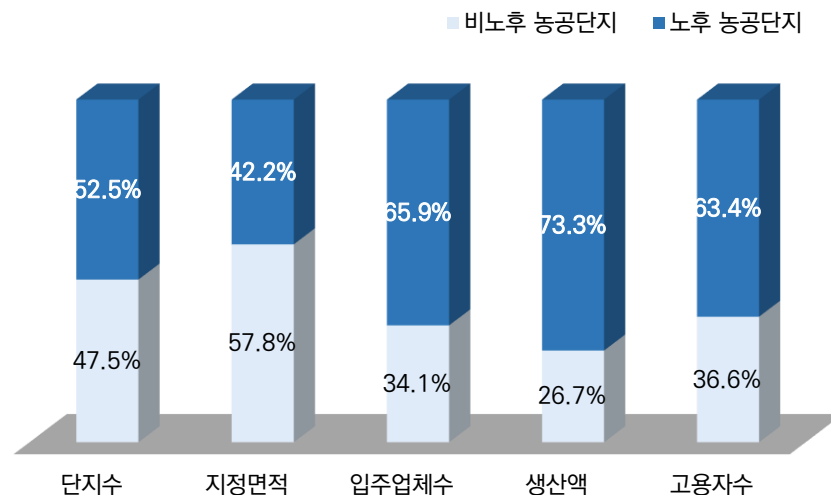
- 전북 농공단지의 52.5%(31개)는 착공 후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 농공단지에 해당
 - 전북 노후 농공단지는 31개로 지역 전체 농공단지의 52.5%를 차지함(전국산업단지현황, 2019)
- 전북 노후 농공단지는 농공단지 생산액의 73.3%, 고용의 63.4%를 차지
 - 전북 노후 농공단지 연간생산액(2019)은 6.0조원으로 전체 농공단지 생산액의 73.3%를 차지하고 있음(전국산업단지현황, 2019)
 - 전북 노후 농공단지 입주업체는 644개(65.9%), 고용은 9,670명(63.4%)에 달함

〈표3〉 전라북도 노후 농공단지 현황

(단위 : 개, 천m², 명, 십억원)

구분	단지수	지정면적	입주업체수	생산액	고용자수
노후 농공단지	31 (52.5%)	4,676.9 (42.2%)	644 (65.9%)	5,995.6 (73.3%)	9,670 (63.4%)
비노후 농공단지	28 (47.5%)	6,393.3 (57.8%)	333 (34.1%)	2,189.0 (26.7%)	5,590 (36.6%)
합계	59 (100.0%)	11,070.1 (100.0%)	977 (100.0%)	8,184.6 (100.0%)	15,260 (100.0%)

주: 업체수 2개 이하의 농공단지는 제외하였음



〈그림5〉 전라북도 노후 농공단지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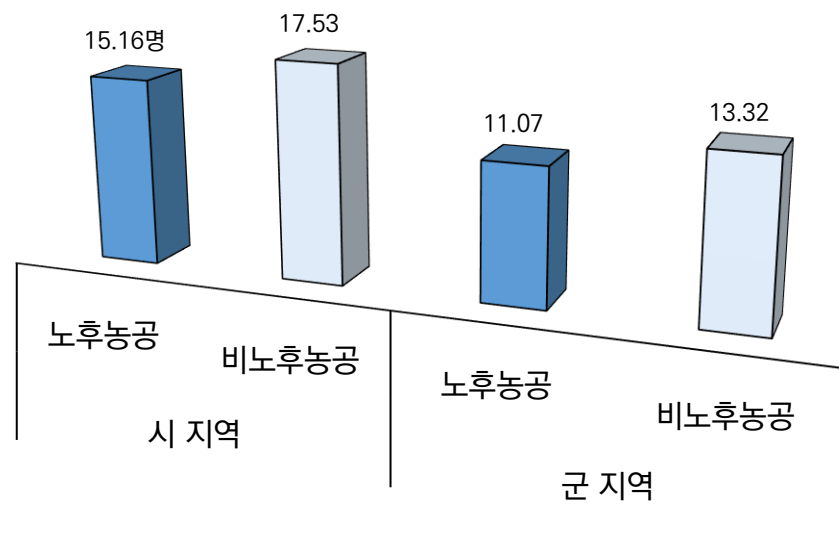
2. 전북 노후 농공단지 현황

전북 노후 농공단지는 식료품 제조업 비중이 높고, 지역별로 업종 및 업체규모는 차이

- 전북 노후 농공단지는 식료품 제조업 비중이 높고 지역별로 업종은 다소 차이를 보임
 - 시지역의 경우 음식료품(25.0%), 자동차 및 트레일러(16.8%), 의료정밀(13.1%) 순서로 비중이 종사자 비중이 높음
 - 군지역의 경우 음식료품(29.7%), 금속가공(8.8%), 고무플라스틱(8.6%)의 순서로 종사자 비중이 높음
- 지역별 산업여건 차이에 따라 군 지역 노후 농공단지의 업체규모는 더욱 작은 상황
 - 노후 농공단지의 업체당 종사자수는 시지역이 15.16명인 반면, 군지역은 11.07명에 불과함(2019년 기준)

〈표4〉 전북노후농공단지의 상위5개업종비교(종사자 기준)

구분	전라북도		전국
	시 지역(노후)	군 지역(노후)	농공
1위	식료품 (1,987명, 25.0%)	식료품 (856명, 29.7%)	식료품 (29,041명, 16.6%)
2위	자동차 및 트레일러 (1,333명, 16.8%)	금속가공 (254명, 8.8%)	자동차/트레일러 (28,515명, 16.3%)
3위	의료, 정밀, 광학 (1,043명, 13.1%)	고무플라스틱 (249명, 8.6%)	기타 기계 (15,245명, 8.7%)
4위	고무플라스틱 (669명, 8.4%)	자동차 및 트레일러 (234명, 8.1%)	전자부품 (14,945명, 8.5%)
5위	전자부품 (521명, 6.5%)	전자부품 (226명, 7.8%)	고무/플라스틱 (12,879명, 7.4%)
상위5개 합	5,553명 (69.8%)	1,819명 (63.1%)	100,625명, (57.6%)



〈그림6〉 전북노후농공단지의 지역별 업체당 종사자수 비교

3. 전북 노후 농공단지 정책

전북은 농공단지 활성화 관련 제도를 마련('19)하고, 시설정비 및 기업지원을 본격 추진

- 전북은 '19년 농공단지 활성화 조례를 제정하여 노후 농공단지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제주('14), 강원('18)에 이어 농공단지의 개발이 아닌 정비/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정책 추진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
 - 기업지원 측면에서 판로, 폐수, 물류비 지원이 가능하고, 기반시설(도로, 상하수도, 녹지, 공동건축물) 정비사업 추진 가능
- 전북 농공단지 지원은 단지 시설정비(인프라)와 입주기업 지원을 중심으로 추진 중
 -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2019년 이후 시설정비 및 입주기업 지원이 추진되고 있으며, 보다 체계적인 관리방안이 모색 중

〈표5〉광역자치단체 농공단지 활성화 조례 제정 및 지원내용 비교

구분		제주('14)	강원('18)	전북('19)
기업 지원	판로확보	○	○	○
	폐수처리		○	○
	물류비		○	○
	인증		○	
기반 시설	도로	○	○	○
	상하수도	○	○	○
	녹지	○	○	○
	공동건축			○

〈표6〉전북 주요 농공단지 지원사업

구분		내용
기업 지원	전북 농공단지 입주기업 혁신성장 촉진 지원사업	• 농공단지 입주기업 사업화 지원 • 2019.6. ~ 2019.12. • 총사업비 : 2억원(10개 기업)
	전북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사업	• 입주기업 폐수처리 및 물류비 지원 • 2020.1. ~ 2020. 12. • 물류비 및 폐수위탁처리비 50% 지원
시설 정비	전북 노후 농공단지 기반시설 정비사업	• 시군별 노후 농공단지 기반시설 정비 • 도로, 관리사, 폐수처리시설, 시설 등 • 2단계까지 (294억), 3단계 진행 중

4. 타 지역 노후 농공단지와 비교

전북 노후 농공단지는 공공·지원시설 부족과 업체의 영세화 문제가 두드러짐

- 전북 노후 농공단지는 지원 및 공공시설 부족, 영세 필지화 등 물리적 측면의 문제 발생
 - 전북 농공단지의 50% 이상은 지원시설이 없으며, 업체당 공공시설은 1.2천 m²(중위수)로 타 지역 농공단지에 비해 작음
 - 전북 농공단지의 업체당 산업시설면적은 5천 m²로 타 지역에 비해 작으며, 10년간 변화량이 -1.1천 m²로 영세화가 빠르게 진행
- 전북 노후 농공단지는 업체규모가 작으나, 산업 부문의 지표는 대체로 타 지역과 유사한 수준
 - 전북 농공단지의 업체당 고용은 13.9명으로 타 지역(15.3명)에 비해 다소 작은 편에 해당함

〈표 7〉 전북 및 타 지역 노후 농공단지 물리적 지표 비교

(단위 : 천m²)

구분		지표	전북 (N=30)	타 지역 (N=262)	U통계량 (Prob)
물리적 측면	규모	지정면적	140.0	133.0	3998.5 (0.916)
		업체당 지원시설면적	0.0	0.0	3739.5 (0.344)
	근무 환경	업체당 공공시설면적	1.2	1.8	2566.5*** (0.001)
		업체당 생산시설면적	5.0	7.4	3199.5* (0.057)
	생산 환경	업체당 생산시설면적 변화	-1.1	0.0	2064.0*** (0.000)

〈표 8〉 전북 및 타 지역 노후 농공단지 산업적 측면 비교

(단위 : 백만원, 명, 천달러)

구분		지표	전북 (N=30)	타 지역 (N=262)	U통계량 (Prob)
산업적 측면	생산성	면적당생산액	513.5	637.1	3250.5 (0.805)
		면적당생산액 변화	105.2	109.8	2761.0 (0.567)
		1인당생산액	105.2	109.8	3334.0 (0.975)
		1인당생산액 변화	54.8	57.2	2914.0 (0.888)
	고용	업체당고용	13.9	15.3	2690.0* (0.090)
		업체당고용변화	-1.7	-0.2	2791.5 (0.627)
	수출	업체당수출	125.2	254.3	3082.5 (0.494)
		업체당수출 변화	7.6	0.0	2734.0 (0.539)
	활력	업체가동률	1.0	0.99	2892.5*** (0.005)



3. 전북 노후 농공단지 실태

1. 실태조사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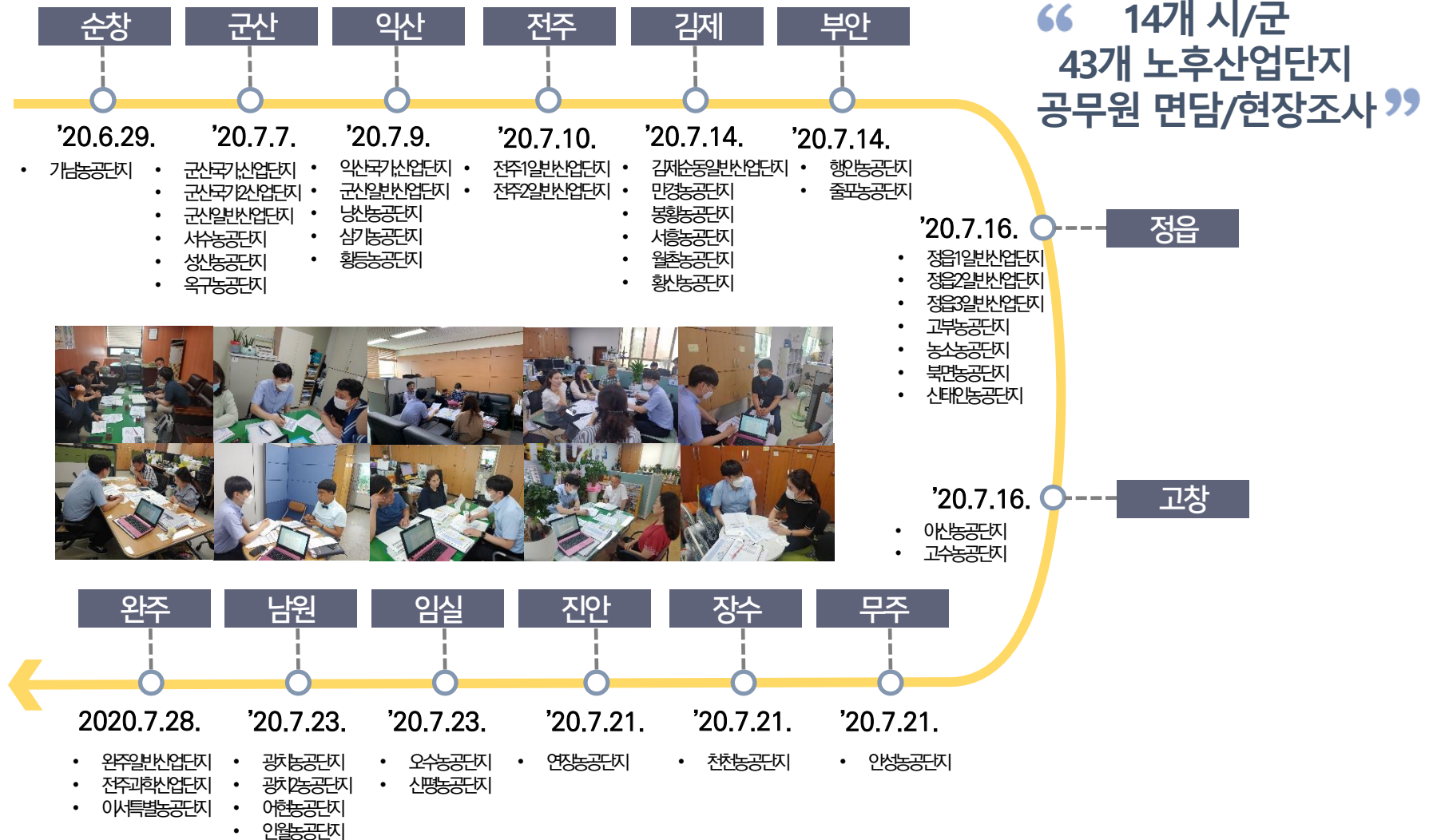
전북 노후 농공단지 실태파악을 위해 정책 수요조사(설문/인터뷰) 및 현장조사 수행

〈표 9〉 전북 노후산업단지 실태조사 개요

구분	정책 수요조사(설문/인터뷰)		현장조사
	정책 공급자 조사	정책 수요자 조사	
조사목적	전북 노후산업단지 실태 파악 및 발전방안 수립을 위한 정책 수요조사		물리적 특성 조사
조사대상	14개 시/군 산업단지 담당 공무원	43개 노후산업단지 280개 입주기업	43개 노후산업단지
조사방법	1:1 방문 조사	- 1차 조사 : 대면/방문조사 - 2차 조사 : E-mail/FAX/Online설문	연구진 방문조사
조사일시	'20.6.24.(수) ~ '20.7.28.(화)	• 1차조사 : '20.7.28.(수) ~ '20.8.11.(화) • 2차조사 : '20.8.12.(수) ~ '20.8.19.(수)	'20.6.24 ~ '20. 7.28.
조사내용	• 노후산업단지 현황 : 시군 노후산단 여건, 경쟁력 강화 대상단지의 우선순위 • 노후산업단지 문제점 : 물리적, 기능적, 제도적 측면의 문제점 • 지원정책 수요 : 지원정책 목표와 방향, 기 추진사업 추진 경과, 지원사업의 수요 • 기타 애로사항 : 노후산단 관리 애로사항	• 업체 현황: 위치, 업종, 매출액, 고용 등 • 산단 물리적 특성: 기반시설(도로, 주차장, 환경처리시설 등), 지원시설 등 • 기능적 특성 : 협의체 구성, 행정기관과의 네트워크, 산업구조, 산업지원기능 등 • 발전 방향: 전북 노후산단 정책 방향 • 기타: 노후산단 관련 규제개선 수요 등	• 기반시설 현황(도로, 주차장, 폐수처리시설) • 지원시설 현황(관리사, 식당 등) • 공장 휴폐업 현황 • 산업단지 주변여건 등

1. 실태조사 개요

전북 노후 농공단지 실태파악을 위해 정책 수요조사(설문/인터뷰) 및 현장조사 수행



2. 공무원 대상 조사 결과

전북 노후 농공단지는 관리/지원 체계가 미흡하고, 물리/기능 등 종합적인 대응 필요

“

노후 농공단지
현황

”

- (여건 전반) 중앙에서 관리하는 국가/일반산단에 비해 농공단지는 관리 사각지대에 위치하고 있어 관리에 애로사항 발생
 - 현안 간 우선순위, 시/군의 예산 상 한계, 법/제도상 제약 등에 의해 종합적/체계적 관리가 어려움
- (지원체계 미흡) 시군에서는 노후 농공단지 관리/지원 체계가 미흡하고, 다수의 농공단지를 한정된 인력과 예산 안에서 관리하고 있음
 - 노후화된 단지의 인프라 정비, 휴폐업 발생 등 기능적 문제, 환경 및 안전 문제 등 동시다발적 문제 발생

“

노후 농공단지
문제점

”

- (물리적) 노후화된 도로/인도/생산시설/상하수도 등 전반적인 인프라의 정비 필요
 - 단지별 업종 분포에 따라 필요한 환경시설이 다르지만, 폐수처리시설에 관한 공통적인 정비 필요성
- (기능적) 계획 상 입주업종과 유치업종과의 불일치, 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휴/폐업, 산단 협의회 구성과 운영 지원에 관한 법/제도적 한계, 기업 지원사업 조차 불가(영세)
- (제도적) 도 차원의 종합계획, 관리기본계획 변경 등 제도 추진 매뉴얼 확립, 단지 관리 및 기업 지원 근거 제도 개선, 휴폐업/미착공 공장 문제 해결

2. 공무원 대상 조사 결과

전북 및 시군의 정책목표를 확립하여 현안대응이 아닌 중장기적인 대응정책 필요

지원정책 수요

○ (정책 목표) 전북도의 종합적인 정책 방향 수립 및 시군별 정책 목표 수립 필요

-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도 차원의 목표를 수립하고, 추진과제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

○ (추진 사업) 중앙 및 도 지원 사업과 단지 수요를 매칭하여 현안 대응 사업 위주로 추진

- 발생 예상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연차 계획 수립이 시급함

○ (정책수요) 기업 및 협의회 지원, 인력수급, 인프라 정비 등 다양한 영역 지원 수요 존재

- 기업의 금융지원(물류비, 생산시설 정비 등), 장기 근로를 위한 근로여건 개선, 인력 교육, 노후 도로 등 시설 정비 정책 등 전반에서 지원 정책의 수요가 있고, 단지별로 원하는 지원정책이 상이함

노후단지
관리 애로사항

○ (인력 수급) 기업 인력 수급 문제 심각(수요-공급 간 불일치, 인구 고령화 등)

- 입주기업-구직자 간 수요 불일치(직종, 연령, 스펙 등), 인구감소 및 청년층 이탈 등

○ (현장-제도 간극) 현장의 수요를 따라가기 위한 관련 제도 상 한계 존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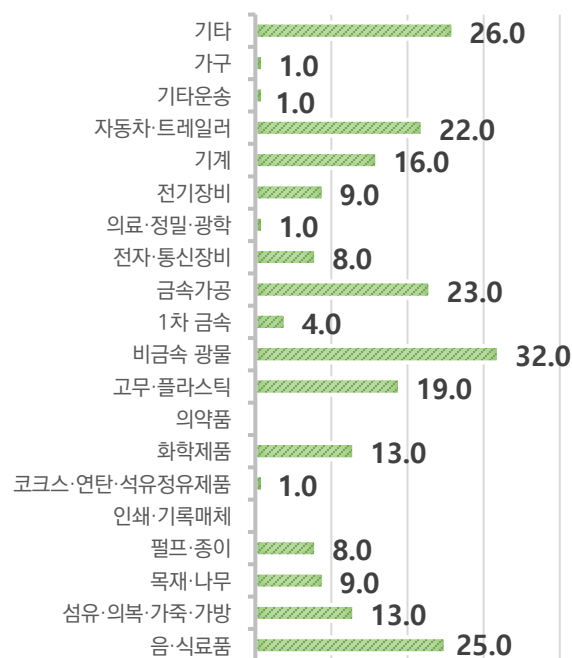
- 기업/ 협의회 지원을 위한 제도, 관리기본계획 변경 등 관리 제도 매뉴얼 부재, 폐수처리시설 등 생산지원시설 개선 관련 부처간 칸막이, 지역 특성에 맞는 업종 제한 정책 도입 등

○ (관리인력 부족) 인프라, 기업지원 등 지원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관리 인력이 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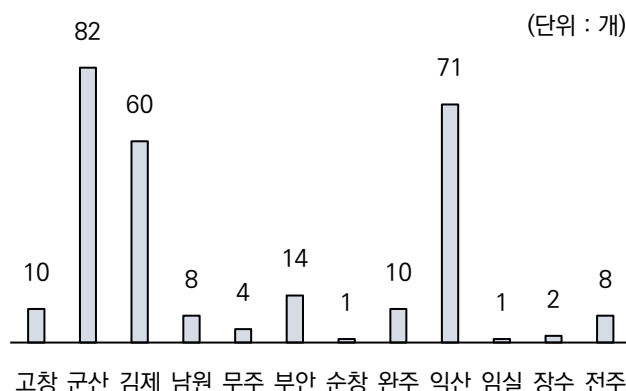
3. 입주기업 대상 조사 결과(응답자 현황)

280개 입주기업(농공: 195개)이 조사에 참여하였으며, 업종 및 매출액 특성은 다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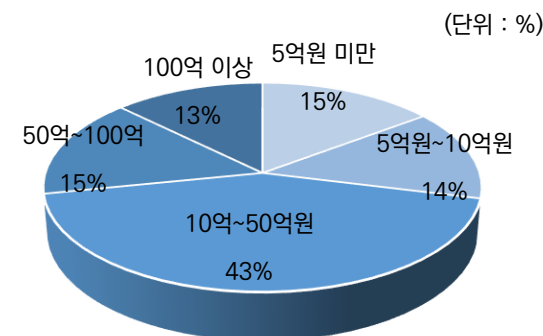
- 도내 280개 노후산업단지 입주기업(국가: 38개, 일반: 47개, 농공: 195개)이 조사에 참여
 - 12개 시군 195개 농공단지 입주업체가 참여하였음(농공단지 및 입주업체 수를 고려하여 표본 설정)
- 조사에 참여한 노후산업단지 입주업체의 지역(시군)과 매출액, 종사자 규모는 다양
 - 조사기업의 매출액은 10억~50억원이 43%로 많으나, 5억원 미만에서 100억 이상까지 다양한 기업이 조사에 참여하였음



〈그림 7〉 조사 참여기업 업종 분포



〈그림 8〉 시군별 응답 현황(농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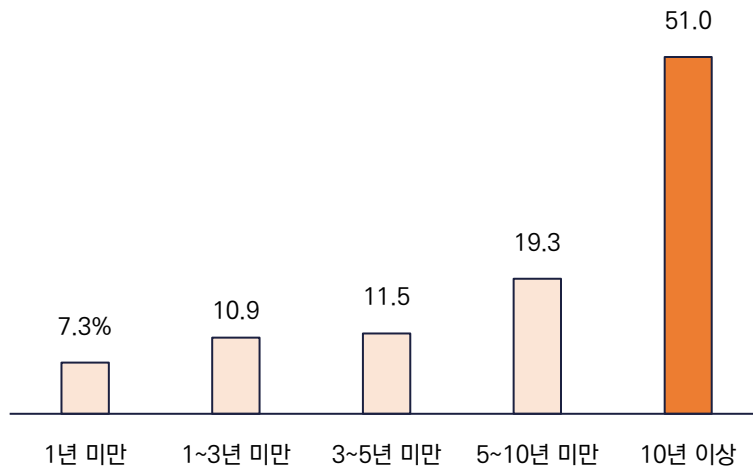
〈그림 9〉 매출액별 응답 현황(농공)

3. 입주기업 대상 조사 결과(물리적 측면)

노후 농공단지 업체의 입주기간은 대체로 긴 편이며, 입주요인은 저렴한 용지가격과 기반시설임

해당 농공단지 입주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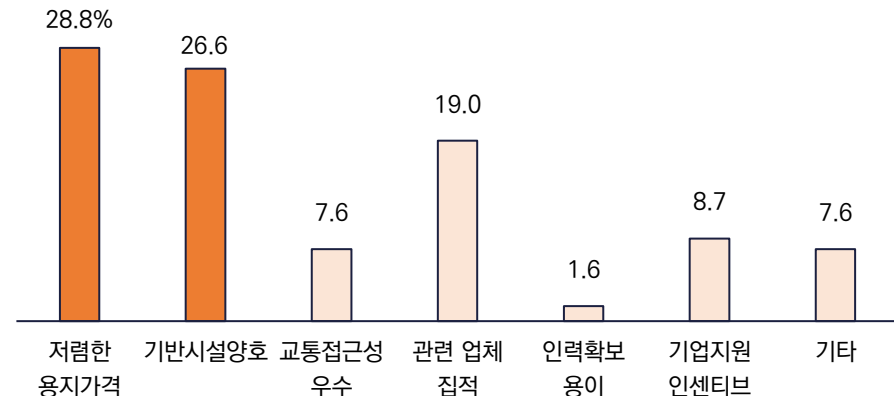
- 조사에 참여한 입주업체의 70% 이상은 입주기간이 5년 이상으로 긴 편에 해당
 - 해당 단지에 입주한 지 10년 이상(51.0%)인 응답자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함
 - 5~10년 미만(19.3%), 3~5년 미만(11.5%)의 순서로 높은 응답 비율을 나타냄



〈그림 10〉 노후 농공단지 입주기간

입주 결정 요인

- 해당 농공단지의 주요 입주결정 요인은 저렴한 용지가격과 양호한 기반시설임
 - 해당 농공단지에 입주 요인으로 저렴한 용지가격이 28.8%로 가장 높은 응답 비율을 나타냄
 - 용지가격 외에 기반시설 양호(26.6%), 관련 업체 집적(19.0%) 순서로 높은 응답 비중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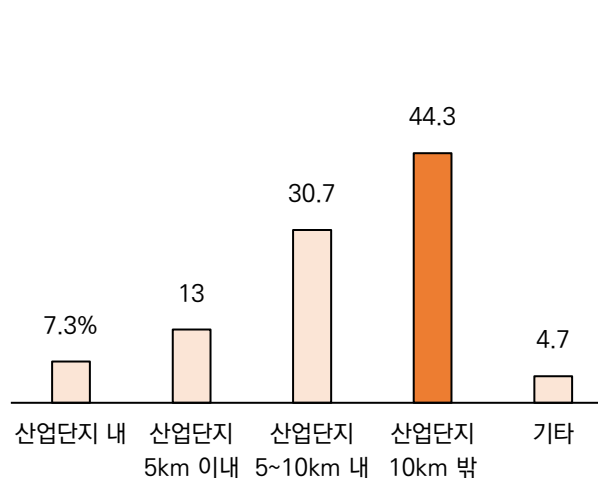
〈그림 11〉 노후 농공단지 입주요인

3. 입주기업 대상 조사 결과(물리적 측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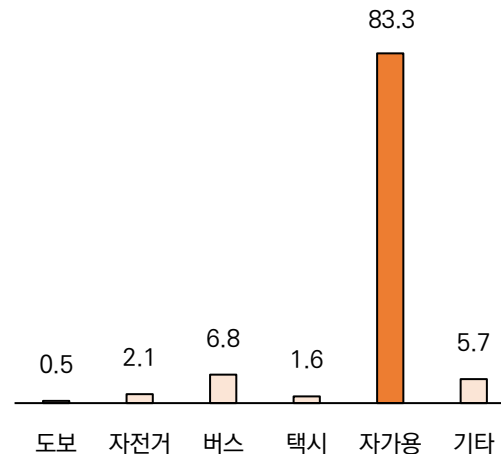
근로자 대부분은 자가용에 의한 원거리 통근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주차 문제 발생

근로자 통근 패턴

- 조사에 참여한 노후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대부분은 단지에서 5km 이상 떨어진 곳에 거주
 - 거주지가 산업단지 10km 밖(44.3%)인 경우가 가장 많으며, 산업단지 5~10km(30.7%)가 두 번째로 많은 비중
- 조사에 참여한 노후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근로자는 대부분 자가용으로 통근하고 있음
 - 주요 통근수단에 대해서 자가용 통근(83.3%)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버스(6.8%)가 두 번째로 많은 응답 분포를 보임
- 자가용에 의한 원거리 통근이 대부분을 차지하면서 단지 내 주차장 부족 문제가 발생



〈그림 12〉노후 농공단지의 근로자 거주지역



〈그림 13〉노후 농공단지의 근로자 주요 통근수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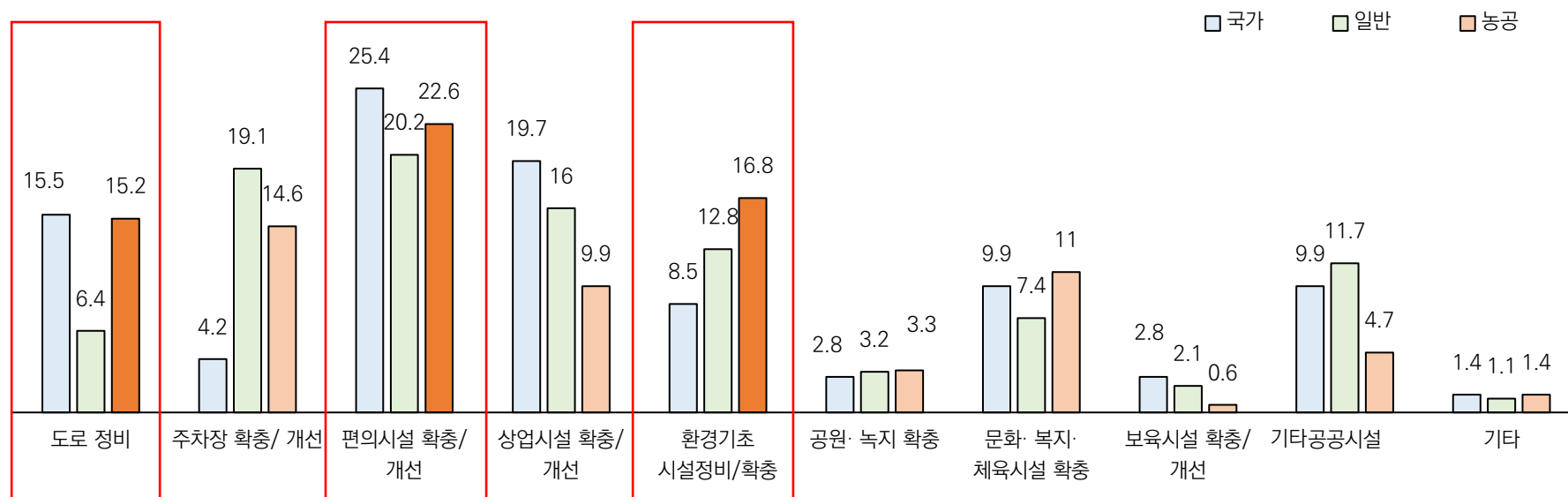
〈그림 14〉주차장 부족에 따른 농촌마을 불법주차유입(황등)

3. 입주기업 대상 조사 결과(물리적 측면)

노후 농공단지의 인프라 정비 수요는 근로자 편의시설, 환경기초시설, 도로정비 순

인프라 정비 수요

- 노후산업단지의 인프라 정비 수요는 편의시설 확충에 대한 수요가 가장 높으나, 단지 유형별로 다소 차이
 - 근로자 편의시설 확충은 단지유형에 관계 없이 공통으로 정비 수요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이 외에는 유형별로 응답분포 차이
- 노후 농공단지의 경우 편의시설 확충(22.6%), 환경기초시설 정비(16.8%), 도로정비(15.2%) 순
 - 노후 농공단지의 경우 상업시설 확충에 대한 수요는 낮은 편이나, 환경기초시설 정비에 대한 정책수요는 높은 편임
 - 노후 농공단지의 높은 식료품 제조업 비중과 영세기업의 오폐수 처리비용 부담과 관련이 있음



주: 노후국가산업단지(38개) 및 노후일반산업단지(47개) 기업 응답결과와 비교하였음

〈그림 15〉 노후 농공단지의 인프라 정비수요

3. 입주기업 대상 조사 결과(물리적 측면)

각종시설의 노후화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단지별 수요를 고려한 정비/확충 필요

기반시설 노후화



〈단지 도로파손(황등)〉



〈인도/가로수 문제(신태인)〉



〈폐수처리시설 노후화(황등)〉

근로자 지원시설 부족



〈관리사무소 방치(고부)〉



〈지원시설(식당) 휴업(월촌)〉



〈단지 내 공원 이용객 부족(낭산)〉

생산시설 노후화 및 휴폐업



〈휴폐업 공장(성산)〉



〈휴폐업 공장(인월)〉



〈휴폐업 공장(광치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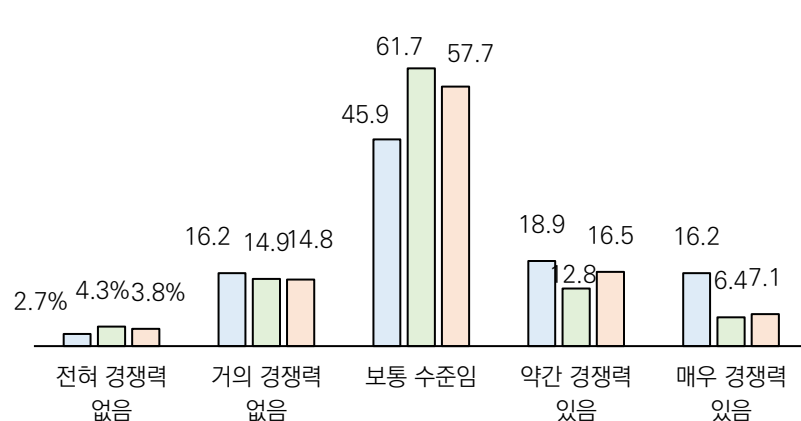
3. 입주기업 대상 조사 결과(기능적 측면)

노후 농공단지 업종 경쟁력에 대한 인식은 낮지 않으며, 생산비용/우수인력 측면의 접근 필요

단지 내 업종 경쟁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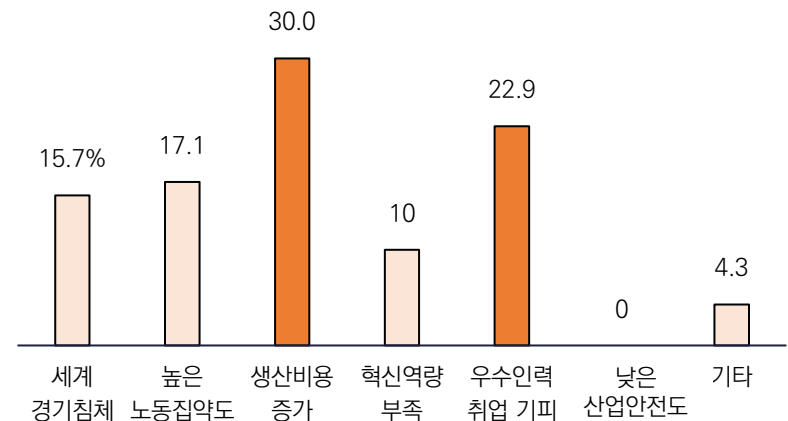
- 노후 농공단지의 업종 경쟁력에 대한 인식은 노후국가 및 일반단지와 차이를 보이지 않음
 - 노후 농공단지 입주 업종의 경쟁력은 평균 3.08점으로 보통 수준이며, 국가(3.30점, 일반(3.02점)과 차이를 보이지 않음
 - 노후 농공단지가 생산성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단편적으로 업종 고도화를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노후 농공단지의 업종 경쟁력 저하 요인은 생산비용 증가(30.0%), 우수인력 취업 기피(22.9%) 순
 - 전북 지역 농공단지 입주업체의 생산비용 증가 주요인은 물류비 부담(수도권 접근성 문제)과 폐수처리(식품기업) 비용
 - 세계화 이후 지속적인 수도권 집중 현상과 함께 농어촌 고령화, 주변 정주여건 문제 등으로 인력 수급 어려움 발생

□ 국가 □ 일반 □ 농공



〈그림 16〉 노후산업단지 입주업종의 경쟁력에 대한 인식 비교

주: 노후국가산단(38개) 및 노후일반산단(47개) 기업 응답결과와 비교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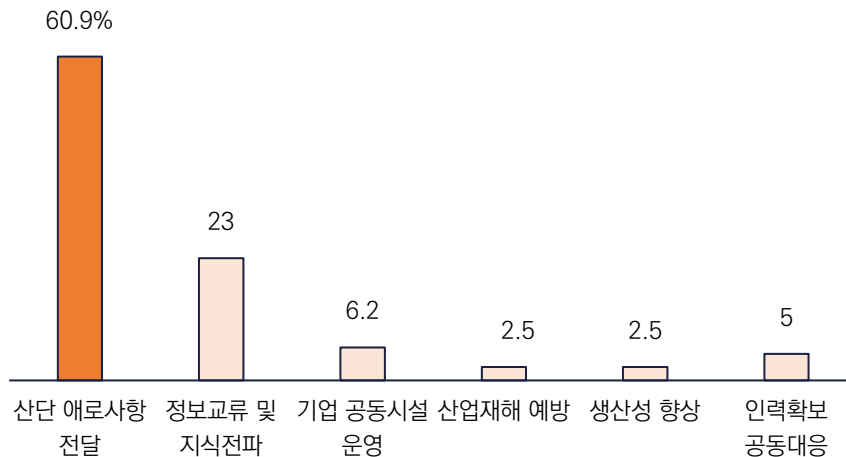
〈그림 17〉 노후농공단지 업종 경쟁력 저하 요인

3. 입주기업 대상 조사 결과(기능적 측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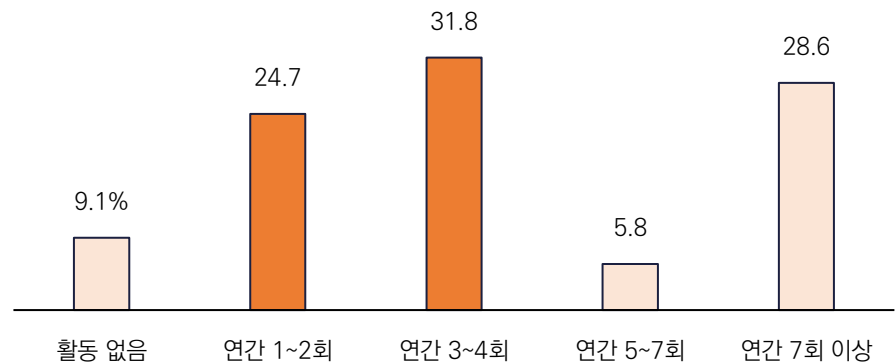
노후 농공단지 협의회는 단지 관리 및 교류측면에서 중요하며, 운영 활성화가 필요

입주기업 협의회 실태

- 노후 농공단지 기업협의회는 단지 애로사항 전달(60.9%), 정보교류(23.0%) 측면에서 필요
 - 농공단지 관리권자(시군)는 다수의 농공단지를 1~2명의 한정된 인력이 관리 → 협의회를 통해 문제점 파악 및 관리 효율화 필요
- 전라북도 노후 농공단지 입주기업 협의회 활동 빈도는 대체로 낮은 편이며, 단지별로 편차 존재
 - 노후 농공단지 입주기업 협의회 연간 활동 빈도에 대해서 연간 4회 이하의 응답이 65.6%를 차지함
 - 특히, 협의회 구성이 불가능한 단지(면적 15만㎡ 이상 또는 입주기업 10개 이상)가 전북 내 16개 존재(27.1%)(2019년 말 기준)



〈그림 18〉 노후 농공단지 협의회 운영이 필요한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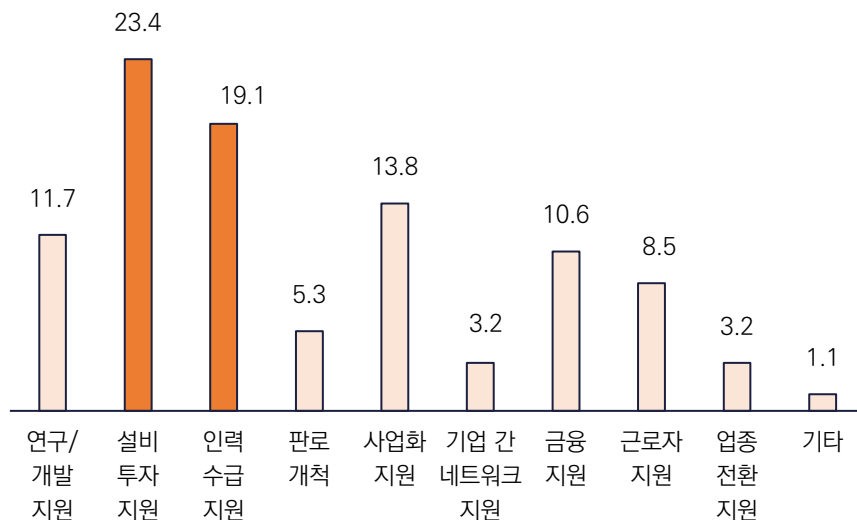
〈그림 19〉 노후 농공단지 입주기업 협의회 활동 빈도

3. 입주기업 대상 조사 결과(기능적 측면)

노후 농공단지 정책 중 근로자 지원과 인프라 정비정책의 중요도 대비 만족도가 낮음

입주기업 경쟁력 강화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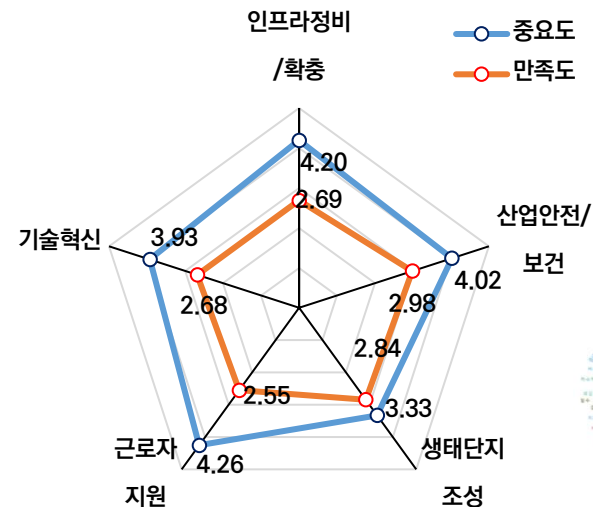
- 입주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에 대해 설비투자, 인력수급, 사업화 지원의 순서로 수요가 높음
 - 노후 농공단지 입주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설비투자 지원에 대한 정책 수요(23.4%)가 가장 높음
 - 설비투자 외에는 인력수급(19.1%), 사업화 지원(13.8%)의 순서로 정책수요가 높게 나타남



〈그림 20〉 노후 농공단지 입주기업 경쟁력 강화 정책수요

정책의 중요도와 만족도

- 노후 농공단지 정책의 중요도는 근로자 지원(4.26), 인프라 정비(4.20), 산업안전(4.02) 순
- 근로자 지원과 인프라 정비 정책이 중요도 대비 만족도가 낮게 나타남
 - 노후 농공단지 근로자 지원 정책의 만족도는 2.55점, 인프라 정비 정책의 만족도는 2.69점으로 중요도 대비 낮음



〈그림 21〉 노후 농공단지 정책의 중요도와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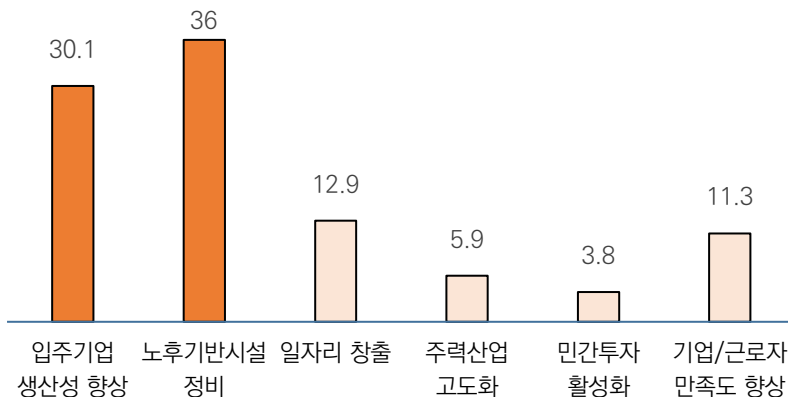
〈그림 22〉 노후 농공단지 애로사항

3. 입주기업 대상 조사 결과(정책 방향)

노후 농공단지의 정책방향은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나, 우선해서 물리적 여건개선 필요

노후 농공단지 정책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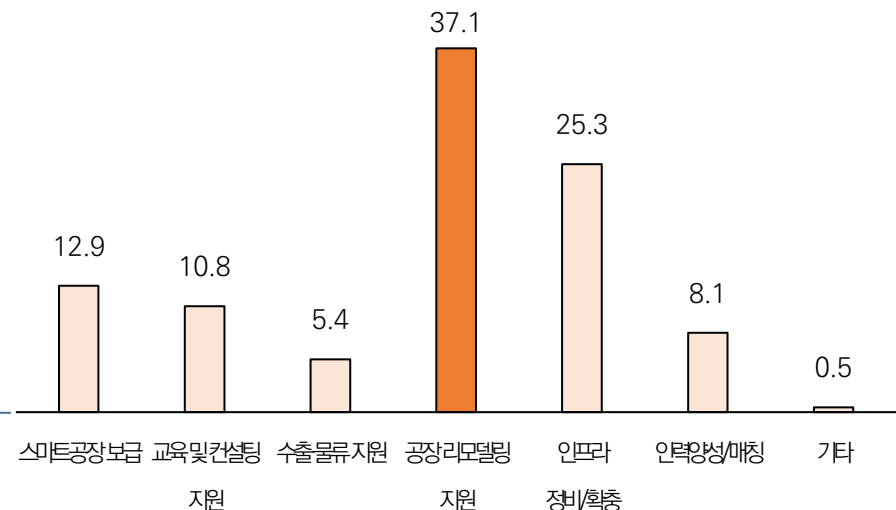
- 노후 농공단지 정책은 물리적-산업적 측면의 종합적인 접근 필요
 - 경쟁력 강화 정책 방향에 대해서 물리적 측면에서 기반시설 정비(36.0%)의 응답 비율이 가장 높음
 - 반면에, 산업 및 기능적 측면에서 입주기업의 생산성 향상 역시 30.1%의 높은 응답 비율을 나타냄
 - 산업지역의 쇠퇴의 원인은 물리적 측면뿐 아니라 산업 및 네트워크 측면에서도 비롯되며, 종합적인 접근 필요



〈그림 23〉 노후 농공단지 경쟁력 강화 정책방향

우선 추진 사업

- 노후 농공단지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우선해서 추진이 필요한 분야는 물리적 측면
 - 우선추진사업은 공장 리모델링 지원(37.1%), 인프라 정비(25.3%) 등 물리적 부문의 응답 비중이 높음
 - 중장기적으로 물리적/산업적 경쟁력 향상을 추진하되, 노후 농공단지의 물리적 여건 개선에 대한 우선 추진 필요
 - 산업지역 쇠퇴는 고착화 경향 → 경로의존성 파괴를 위한 정책개입 시작은 물리적 측면(Boschma & Lambooy, 1999)



〈그림 24〉 노후 농공단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우선추진사업

4. 실태 종합

전북 노후 농공단지의 물리/기능/제도 측면의 실태를 반영한 경쟁력 강화 필요

물리적 관점

- (인프라 부족/노후화) 노후 농공단지 인프라/생산시설 노후화와 근로자 지원/편의시설 부족 문제 발생
- (지자체 대응) 사후 문제해결형(임기응변식) 시설 정비 → 선제적 노후 시설 정비를 통한 순차적 노후시설 정비 추진 필요

산업/기능적 관점

- (산업위기 영향) 산업지역(군산, 익산)을 중심으로 주력산업(자동차, 조선) 위기로 인한 산업침체 및 휴폐업 증가 발생
- (농어촌 연계발전) 군 지역 노후 농공단지는 농어촌 산업특성에 맞는 융복합산업 육성 및 기업 경쟁력 강화 필요
- (인력수급) 농어촌 지역의 열악한 입지 및 정주여건과 농공단지 근로자 지원 부족에 따른 인력수급 문제 발생

정책/제도적 관점

- (기업/근로자 지원) 중소기업 기준에 미달되는 노후산단 소기업 대상 기업지원 등 지원 정책의 다양화 필요
- (관리체계 확보) 증가하는 농공단지 관리수요에 대응하고, 산단별 맞춤형 처방을 위한 협의회 구성 및 활성화 지원 필요
- (체계적 계획 수립) 전북 노후산단의 장기적/종합적 계획과 시군의 정책 목표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관리 필요

4. 전북 노후 농공단지 재생 방향

1. 기본방향(안)

노후 농공단지 여건을 반영하여 공간/산업/사람 측면에서 기본방향 수립

비전

공간, 산업, 사람이 공존하는 농어촌 활력 중심지 조성

정책방향

(공간) 쾌적한 일터 조성

- 농공단지 노후 기반시설 정비
- 친환경 농공단지 조성

(산업) 시군 특화발전 도모

- 시군 산업구조를 반영한 특화발전
- 지역농업 연계 융복합산업 육성

(사람) 일자리 매칭 강화

- 농어촌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 입주기업 기업지원 강화

분야별 추진전략

노후 인프라 정비를 통한 농촌형 그린 산업단지 조성

- ① (개념) 농공단지 맞춤형 인프라 정비/확충으로 쾌적한 환경 조성
- ② (현황) 노후 농공단지 기반·지원시설 부족 및 생산설비 노후화 문제
- ③ (전략) 노후 농공단지 기반시설 정비를 통한 친환경 그린 산업단지 조성

시군/단지별 여건을 반영한 산업경쟁력 강화

- ① (개념) 지역/단지별 특성을 반영한 농공단지 특화 발전체계 구축
- ② (현황) 지역/단지별 특성차이와 관리체계 부재로 효과적인 지원정책 수립 어려움
- ③ (전략) 시군 관리체계 강화 및 지역 산업 연계 융복합산업 육성

농공단지 중심 지역일자리 매칭 및 근로자 지원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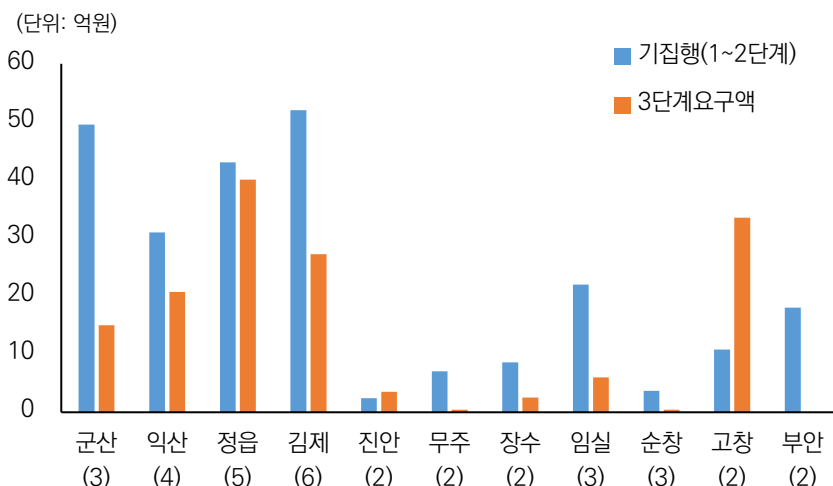
- ① (개념) 농공단지 일자리 매칭 및 근로자 지원을 통한 인력수급 문제 해소
- ② (현황) 열악한 근로환경과 접근성 부족으로 인력수급의 어려움 발생
- ③ (전략) 시군별 농공단지 중심의 일자리 매칭 및 근로자 지원체계 강화

2. 중점 추진과제

(공간) 농공단지 기반시설 정비 확대 및 영세한 규모에 대응한 공동 편의시설 확충

노후 농공단지 기반시설 정비사업 지속 추진

- 전북의 노후 농공단지 물리적 측면에서 타 지역보다 경쟁력이 떨어짐 → 지속적인 정비 필요
 - 전북은 '11년부터 시군별 농공단지 기반시설(상하수도, 도로, 가로수, 관리사 등) 정비사업을 추진 중(2단계까지 293.92억)
- 농공단지별 인프라 정비 수요 진단을 통해 단계적으로 정비사업 확대 추진 필요



〈그림 25〉 전라북도 농공단지 기반시설 정비사업 추진 현황

자료: 전라북도 내부자료(2020)

생산설비 정비 지원 및 근로자 편의시설 확충

- 농공단지 특수성을 고려한 노후생산시설의 정비 지원 정책 추진
 - 노후 농공단지 우선 추진사업으로 생산설비 리모델링에 수요가 가장 높으나, 영세기업 비중이 높아 자체정비 한계
 - 농공단지 내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생산설비 리모델링 지원방안사업 추진 필요
- 농공단지의 연접개발을 통한 규모경제 확보 및 공동 활용 근로자 지원시설 확충 추진



〈그림 26〉 남원시의 농공단지 연접개발을 통한 규모경제 확보 사례

2. 중점 추진과제

(산업/제도) 농어촌 융복합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연계 발전과 농공단지 관리체계 확보

전라북도 농공단지 재생 시범사업 추진

- 노후 농공단지 유희시설과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농어촌 융복합산업 혁신단지로 전환
 - 도시형: 지역 대학과 지역의 전략산업 등의 기반을 활용하여 창업/일자리 확충에 초점
 - 농촌형: 지역농업과 연계하여 체험/관광 기능을 확충하여 농어촌 활성화에 초점

기존공장	+	추가시설*	
		창업시설(일자리)	관광시설(휴식처)
제조중심 공장		R&D, 교육공간, 창업공간, 공동 제조유통시설	체험, 관광시설, 주차장

〈표 10〉 전북 노후 농공단지 재생 시범사업 후보(안)

구분	단지명	현황	재생방향
도시형	○○ (익산)	석제품 특화단지로 노후화 및 산업침체 문제 발생	지역대학 연계 예술창업기능 도입 및 기반시설 정비
	□□ (김제)	인프라 노후화 및 휴폐업 공장 증가(약 30% 수준)	시군 전략산업(미래형 친환경 농기계) 특화단지 조성
농촌형	◇◇ (남원)	대기업 입주단지로 인프라 부족 및 노후화 문제	지역자원과 계열사(제과, 카페 등) 연계 관광/체험기능 도입
	△△ (순창)	대기업 입주단지로 인프라 노후화 문제 발생	계열사(유기농) 콘텐츠 활용 체험/관광기능 도입

시군 노후 농공단지 체계적 관리 지원

- 노후 농공단지는 개수가 많아 관리권자(시군)의 체계적인 관리에 애로사항 발생
- 노후 농공단지 핵심주체인 관리권자와 관리주체를 대상으로 체계적 관리 지원 필요
 - 관리권자: 관리의지 확보를 위한 시군 평가 및 인센티브 마련 (전북도 공모사업 가점/공무원 포상 등)
 - 관리주체: 입주기업 협의회 활성화 지원(운영비/간담회 등)

농공단지 근로자 지원 강화

- 노후 농공단지는 입지여건 및 기업규모상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입주기업 경쟁력 강화정책 수요: 설비투자(1위), 인력수급(2위)
- 노후 농공단지 인력 매칭 강화를 위해 근로자 지원과 편의시설 확충 동시 추진 필요
 - 근로자 지원: 통근비 지원, 문화/복지프로그램 운영
 - 편의시설 확충: 농공단지 맞춤형 소규모 편의시설 확충



감사합니다